

# 문희상 “새로운 100년, 총리추천제 개헌으로 시작해야”

〈국회의장〉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내년 21대 총선서 국민투표 제안  
국회도서관서 홍진선생 흉상 제막

국회가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총리추천제 개헌’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 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

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임시의정원 3대 의장 고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

를 복수 추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다음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의 분산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 앞서 국회도서관에선 ‘홍진 선생 흉상 제막식’이 열렸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에게 임시의정원 관인 등 홍진 선생 유품을 전달했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여야 지도부의 경우 행사 후 임시의정원 출발지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버튼을 누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짜 뉴스에 휘둘린 제1야당... 毒이 된 경호처 의혹 제기

‘가사일’ 의혹, 당사자가 사실 부인  
운전기사 낙하산 의혹 ‘사실무근’

보수야권에서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연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의혹이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보수야권의 이러한 모습은 외연확장에도 악영향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수야권이 부각시키는 대통령경호처 관련 의혹은 이렇다. 우선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본인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家事)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의 지난 8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여직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및 청소



자유한국당 지도부.

/자유한국당

등 가사 일을 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한 후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주 경호처장의 경질”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 경호처장 경질’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사건의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이 당사자

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가 편한 때에 하루 1~2시간 공관청소를 했다”고 했다. 정해진 청소업무만 했을 뿐, 주 경호처장 가족의 가사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향후 ‘정정보도 요청’ 및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경호처가 대통령운전기사를 3급 고위공무원으로 ‘낙하산 임용했다’는 의혹이다.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호처 인사 관행상 5~6급인 대통령운전기사가 고위직인 3급으로 임용됐다. 이 운전기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라면서 “후한 인사의 원인을 짐작할 만하다”고 했다.

대통령운전기사 낙하산 임용 의혹 역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현 대통령운전기사는 노무현 정부 때 4급 공무원이었다”며 “당시 5년 경력을 인정받아 당당하게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고 해명했다. 그 뿐인가. 경호처 인사 관행상 대통령운전기사는 5~6급이라 것도 사실무근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운전기사의 급수는 3급이었다.

의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수야권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의혹을 부각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보수야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공세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보수야권 입장에서 외연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해보자. 최근 대통령운전기사가 3급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부분을 보수야권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고위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고시 출신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보수야권의 이러한 의혹은 ‘엘리트주의’라는 이미지를 역으로 국민들에게 부각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 트럼프 “EU산 제품에 관세 110억달러 부과할 것”

“중외에도 관계도 재정립 원해”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10억 달러 규모의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가 여러 해에 걸쳐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이는 곧 끝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을 겨냥했던 것과 같은 논조를 보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검토에 들어간 관세 부과 목록에 헬리콥터부터 치즈까지 여러 산업부문이 망라돼 있다는 점도 중국과 벌인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무역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 무역전쟁은 아직 안 끝났으며 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지고 있는 세계 경제가 이것을 다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외에(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재정립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그동안 거의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만큼 양측이 앞으로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중국, EU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그간 벌인 무역분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김문호 정치경제 부장 kmh@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철취를 위협하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했지만, 각국 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중요한’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USMCA를 흔들어놓았다.

미국의 산업별 고율 관세의 서막을 올린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계속 부과되고 있어 캐나다는 이에 대한 보복을 검토하는 등 미국에 관세 철취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도 이달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다.

미국은 최근 개발도상국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인도를 제외하기로 했고 인도는 이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국민안전 위한 것”

“소방, 권력작용 아닌 서비스작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권력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국가직화는 국민 안전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소방은 권력 작용이 아닌 서비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직화돼야 한다”며 “통상 국가 사무로 분류되던 것도 소방이 담당하는 비율이 50%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 사무는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나뉜다. 경찰의 경우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청 아래 17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 2000여개 파출소·지구대로 구성한다. 경찰관 수는 12만명, 연간 운용하는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경찰 행정은 통상 지방 사무로 인식되지만, 국가 사무와 결친 영역이 상당수에 속한다.

당정이 지난 2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확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참석,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더불어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본부장과 경찰청장 임명권을 부여,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소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사무로 규정, 인력과 예산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 등 대규모 복합 재난이 커지면서 소방의 국가 사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 현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넘어섰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석대성 기자